

불안정한 한반도 평화 : 북한의 7.5 미사일 시험발사와 10.9 핵실험의 영향

고 성 윤

(제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국문요약〉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핵무장에 집착하는 것은 북한체제의 수호와 대남 군사적 우위 확보 등의 정치·군사적 목적 외에 국제적 지위 향상과 외교적 고립탈피, 그리고 전략무기의 수출을 통한 외화벌기 등 외교·경제적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 대내적으로는 권력승계와 경제난, 대외적으로는 외교적 고립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 운반수단인 미사일 개발을 강행하는 것은 이와 같은 당면문제들을 동시에 타개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그들 나름대로의 계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의 핵·미사일 확산에 따른 악영향은 첫째, 역내 군비경쟁의 확산 가능성 증대, 둘째, 대북군사전략의 대폭적 수정 불가피, 셋째, 남북관계에서 남측이 보다 수세적 입장으로 전환 강요, 넷째, 남북 군사력 균형의 파괴, 다섯째, 핵전쟁에 휘말릴 위험성 증대, 여섯째, 국론분열에 의한 사회 혼란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선적 대응은 첫째, 남북관계 측면에서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강한 전략을 동시에 구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교적 차원에서 현실적 대응은 우선적으로 유엔 결의안에 따라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수준의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모험주의를 억제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 무기체계 정비 등을 통한 보복능력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 넷째, 억지력 및 군사력 균형을 보장하고 있는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하게 유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북한 대량살상무기, 핵, 미사일, 장거리운반수단, 전략무기

1. 서론

10월 9일 오전 10시 35분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

아에는 북한 핵폭풍이 몰아침으로써 기존 질서의 기초를 변화시킬 만큼 커다란 파장을 몰고 왔다. 국제적으로는 해상검색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으나 유엔 안보리가 10.9 핵실험을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여 유엔헌장 7장 41조를 적용하는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킴으로써 WMD비확산에 대한 회원국의 결의를 보여주었다.¹⁾ 대내적으로는 대북포용정책의 효용성에 대하여 냉정하게 평가를 하도록 상황이 변화되었으며, 북핵불용, 평화적 해결,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란 북핵 3원칙에 대한 기존 입장에도 비판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포괄적인 재검토가 예상된다. 그만큼 북한 핵실험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질서를 뿌리부터 뒤흔들 만큼 큰 충격을 동반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이전의 상황과는 판이한 정세의 변화를 맞은 것이다.

핵실험 이전의 남북한 관계를 냉정하게 짚어보면 북한의 핵개발 동결이나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 제한 등 안보 및 군사영역에서의 성과는 미흡하나,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경제협력 폭의 증대, 문화 및 관광, 체육, 학술회의 전반에 걸친 인적 교류의 증가는 향후 점진적이거나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특히 북한의 군사적 요충지이며 서부전선의 주 공격축인 개성지구에 남측 기업을 위한 공단을 연 것에 대하여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개성공단의 개방을 평시 긴장완화나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매개체로 삼을 수 있으며, 북한군 기지의 타지역 이전이나 왕래하는 외부 인력에 대한 정보들이 주민은 물론 군인들에게 전파될 수 있어 향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들이 지난 7월 5일 북한이 감행한 미사일 시험발사

1) 유엔 안보리는 10월 14일 오전 미영불중러 5개 상임이사국과 의장국인 일본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안 수정 보완을 거쳐 오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북핵실험 제재결의안을 채택하였음. 결의안은 중러가 요구한 비군사적 제재만을 요구하는 헌장 7장 41조를 적용키로 합의되었으나 군사제재 성격의 '화물검색조치'가 들어 있어 이의 이행 여부는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북핵정책의 총체적 실패란 비판에 직면했던 부시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시켜 제재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외교

에 이어 10월 9일 핵실험으로 인하여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는 등 변화의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이들 사태들은 그동안 구축되어온 남북간의 신뢰와 평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으며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을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근본적으로 북한은 변하지 않았으며 변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 것이다. 비판론자들의 시각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아직도 연방제, 국보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북미평화협정, NLL의 재설정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하여 일관된 입장을 고집하고 있으며 핵개발이나 미사일 개발 등 비대칭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여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제 '선군정치'가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이 나올 만큼 북한의 본색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족 공조론을 앞세워 한반도 상황을 '미국 대 한민족'의 대결구도로 몰아가는 대남선전 전략에 따라 남남갈등만 깊어졌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논문에서는 첫째, 2006년 한반도 중심의 전략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핵실험안을 분석하고, 둘째, 북한의 7.5 미사일 시험발사 및 10.9 핵실험의 의미를 검토하여, 셋째,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핵무장이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전략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II. 한반도 전략환경 관련 주요 현안²⁾

지난 2005년과 마찬가지로 2006년 역시 동북아 지역에서는 강대국들간의 치열한 대립과 갈등, 이로 인한 전략적 긴장이 지속되었으며 관점에 따라서는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냉전체제가 조성되고 있다고 평가할 정도로 갈등이 있으나 초국가 안보위협 등 사안에 따라서는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이중적 구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역내의 강대국들간

2) 고성운, "동북아 전략환경 평가와 우리의 대외정책 방향", 2006년 8월 17일 평통

의 상호관계는 과거 냉전시대와 같이 이념에 따른 전면적이며 단순한 대립구도의 관계가 아니라 사안별 실리계산에 따라 협력과 대립하는 복잡하면서도 다층적인 이합집산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한반도 평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파급 효과가 동북아 역내 전체의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대표적 현안을 중심으로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북아 역내 안보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안 이슈로서는 첫째, 미·중간의 전략적 대립이 구조화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사안에 따라 협력(대테러,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경제협력, 교육/문화/체육교류 등)하면서도 일부 안보 및 군사문제에 있어서는 전략적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만문제의 경우 중국은 2005년 3월 대만에 대한 무력행사를 합법화하는 '반 국가분열법'을 제정한 이후 대만군사작전을 염두에 둔 대대적인 장성급 인사를 단행하여 법안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행위는 미국의 대만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한편, 미국은 대만에 대한 포괄적인 군사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국의 '반국가 분열법'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전인 2005년 2월부터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동선언을 통하여 '대만해협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의 촉진', 중국의 '군사문제에 대한 투명성 증대'를 미일 양국의 공통적인 전략적 목표로 선정하여 미일 대 중국의 극단적 대결구도로 악화되기도 하였다.

군사력 증강 면에서 볼 때 미국은 중국을 크게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8월 산둥반도와 인근해역에서 실시된 대규모의 중러 연합 군사훈련(중국군 8천명, 러시아군 1500명), 사정거리 8000km 이상의 JL-2 미사일을 장착한 094, 093급 핵추진 잠수함과 미사일 등 전략무기의 증강, 러시아로부터의 첨단무기도입 등은 미국으로 하여금 경계심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한 현상들이다. 중국은 2003년을 제외하고 지난 15년간 두자리수 이상의 국방비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까지 중국 잠수함

부대는 광범위한 해저지형조사 등 잠수함의 전력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핵잠수함의 日영해 침범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2002년부터 국방부로 하여금 중국 군사력 변화추이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중국을 전략적 위협세력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005년 5월부터는 미 하원 군사위원회 의원중심으로 '중국연구의원모임(Congressional China Caucus)' 이 결성되어 의회차원에서 중국 군사력 증강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강화하고 있는 점도 우리의 주목을 끈다. 2005년에 이어 최근까지도 미국은 태평양지역에 핵잠수함 전력의 60%를 배치하고 F-15E, 글로벌호크, 공중급유기, 미 본토의 B-2 폭격기, 공중발사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끄기지에 이동배치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은 전략적 결속을 강화하여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는 양상이며, 일본내 미군기지를 중국에 대항하는 동북아 미군사력의 거점으로 활용함으로써 미중간의 대립이 구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2006년 1월 19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보장하기로 합의하여 동맹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보장하되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존중할 것이며 한국의 의지와 무관하게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상호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세계전략과 군사변혁에 따른 군사력 운용개념의 변화를 동맹국인 한국이 이해하고 수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왜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을 중시하는가? 미국은 향후 해외에 배치한 자신의 군사력을 필요에 따라 융통성있게 운용하여 군사력의 전략적 효용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전력재편과 운용상에 변화를 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군사전략의 변화는 해외주둔군의 규모를 감축하여 주둔국 국민들과의 마찰도 줄이고 반면에 효율성을 높여 경쟁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세계 도처에서 발생한 추국가전 의현에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택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보장은 기존 미군의 군사전략 및 군사작전의 틀을 변화시키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관련국가와 관련국 주변의 역내 안보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안보와 연계하여 우려하는 시각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대북 억지능력의 약화가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이며 원하지 않는 지역분쟁에도 휘말릴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³⁾ 그러나 한미동맹이 존속하는 한 미국의 정보전 능력, 원거리 정밀타격능력, 원정 기동능력 등으로 북한의 군사행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동북아 지역분쟁의 경우는 중국에 의한 대만 침공을 들 수 있는데 대만 자신이 중국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제한된 군사능력을 갖고 있고 상당기간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하므로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북한 핵문제의 교착과 7.5 미사일 시험발사를 주요 현안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핵문제는 동북아 안보에서 핵심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동북아를 넘어 세계차원의 안보 사안으로 인식되고 다루어지고 있으나, 6자회담이 결실을 얻지 못한 채 난항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고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결의안 1695호, 2006.7.15)이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됨으로써 상황이 악화되었는데 10월 9일 북한의 도발적인 핵실험 파장으로 여건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현 상황으로 볼 때 향후 어렵게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더라도 단기간에 북한 핵문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물론 북한이 대내적으로 자신의 강력한 자위력으로 미국의 침략의지를 철저히 봉쇄하고 있다는 선전을 확산시키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대북강

3)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3월 8일 공사 제53기 졸업 및 임관식 치사에서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하여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시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이며,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언급은 이후 한미안보정상회담(PSI) 등 한-미 협의에서 중요한 키워드라 되어 다뤄졌다.

경자세를 변화시키고자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무리한 강수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효과를 얻기에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북한 자신이 미국의 군사적 능력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며 호전적인 군사행동으로 미국의 자세를 변화시킬 가능성 또한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북한의 7.5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10.9 핵실험으로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기본 태도와 김정일의 지도력에 대한 신뢰에도 상당한 손상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미국 역시 대북압박에는 한계를 안고 있다. 유엔결의를 통한 대북제재나 미국과 일본 중심의 제한적인 대북 금융제제, 군사력 시위, 인권문제 제기 등은 부분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정권과 체제유지를 최우선시하는 북한이 쉽게 굴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며, 그렇다고 PSI(확산방지구상)를 통한 군사제재성 해상봉쇄나 목표물에 대한 '정밀타격(surgical strike)' 카드를 쓰기에 대내외 여건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이다.⁴⁾ 북한은 현 상황을 악화시키더라도 대화의 끈만은 완전하게 놓지 않은 상태로 '질질' 끌고 나갈 가능성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립을 통하여 위기의식을 조성, 체제를 단속하고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의 위험성을 가시화 시켜 한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II. 북한의 7.5 미사일 시험발사와 10.9 핵실험의 의미

1. 7.5미사일 시험발사

가. 미사일 개발 수준⁵⁾

4) 최근 황장엽(83세) [북한민주화동맹위원장]은 신동아(2006년 10월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힘만으로는 대북제재에 한계가 있으며 대북 군사제재로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음. 황위원장은 중국의 경우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핵무장을 반대하겠지만 미국과 동조하여 군사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하여 군사적 처방의 한계성을 지적함. 그는 근본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도부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북한은 '70년대 중반 중국의 DF-61로 명명된 전술 탄도 미사일의 개발 계획을 인지한 이후 미사일 개발에 대한 관심을 쏟기 시작하였다.⁶⁾ 당시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만한 자체의 기술 인력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중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미사일을 개발하고자 계획하였다. 그러나 국내 사정으로 인하여 중국이 이 미사일의 개발계획을 취소하자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기술도입을 하려던 초기의 계획을 변경하고 이집트와 미사일 개발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자체 고유모델 개발의 제일보를 내딛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협정에 의하여 북한은 이집트의 미사일 개발 'Know-how'는 물론 당시 이집트가 보유하고 있던 소련제 스커드 B 미사일과 관련장비를 인도받을 수 있었다. 1976년 북한은 이집트로부터 소련제 스커드-B 미사일 2기를 양도받게 되었으며, 필요한 기술적 지원은 이집트 및 중국으로부터 지원받아 자체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다. 북한으로서는 탄도 미사일 개발의 첫 난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자체 미사일 개발을 추진시킬 도약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스커드-B(화성 5호)의 경우 북한은 '8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이집트의 미사일 제조기술을 완전히 습득해 '84년에는 동해 「무수단」 미사일 시험장에서 2회의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1986년부터는 본격적인 양산체제로 발전시켜 나갔다. 스커드-B는 1톤의 탄두를 탑재하고 320km를 날아가 원래 모델인 구소련제 스커드-B보다 사거리가 15% 이상

의 관련 정보를 참고할 것. 고성운 외, [2003-2004 동북아 군사력] (서울: KIDA Press, 2004); David C. Wright and Timur Kadyshev, "An Analysis of the North Korea Nodong Missile," in *Science and Global Security* (November, 1993); Barbara Starr, "CIA expects Nodong deployment next year," *Jane's Defense Weekly*, No. 11 (November 1995), p. 16; Warren Strobel, "North Korea Shops for Nuclear Technology in Russia," *The Washington Times* (July 5, 1994); PS/NIE 95-19 DCI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President's Summary Emerging Missile Threats to North America During the Next 15 Years," (November 1995); Barbara Starr, "North Korean Missile R&D Gains New Pace," *Jane's Defense Weekly* (June 25, 1994), p. 10; Greg Gerardi and Joseph Bermudez Jr., "An Analysis of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 Testing," *Jane's Intelligence Review*, Vol. 7, No. 4 (1995), p. 190.

6) David Wright and Timur Kadyshev, "The North Korean Missile Program: H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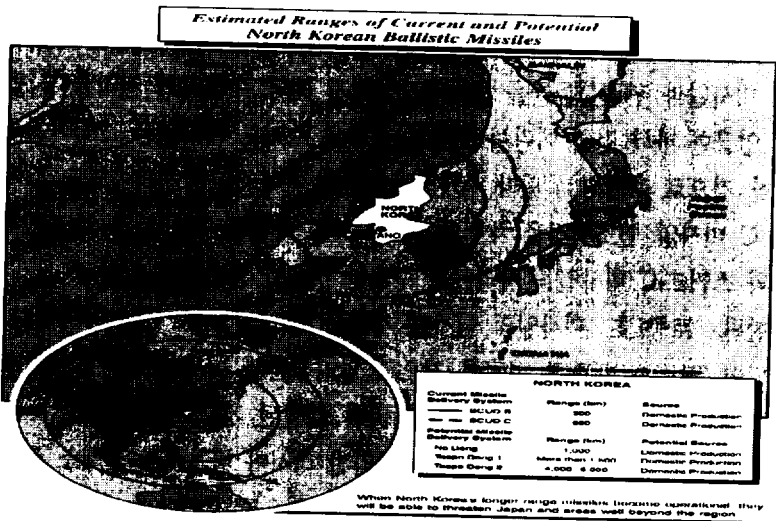
증가된 것이며 1986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월 8-12개)을 시작하였다.⁷⁾ 당시 생산된 스커드-B 미사일은 '87년 7월부터 '88년 2월초까지 100여기가 이란으로 인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은 1988년부터 스커드-B를 개조하여 스커드-C(화성 6호)의 개발에 착수하였다. 스커드-C는 하중을 30%까지 줄이고 로켓 몸체 길이는 늘려 추진연료를 25% 증가시키는 방법에 의해 개량된 미사일로 사정거리가 300km에서 500km로 증가되었다.

북한은 '87년에 스커드-B 미사일을 이란에 수출한 이후 개량된 스커드-C 미사일과 관련부품들을 중동국가들에게 적극 수출하기 시작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란이 구입한 북한제 스커드 미사일은 200여기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은 이란에 이어 '91년 시리아와도 스커드 C 미사일 인도협정을 체결한 바 있는데, 북한은 '92년까지 약 100여기의 스커드-C 미사일을 시리아에 수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로동1호」 미사일의 디자인 개발은 '89년 스커드 C와 동시에 시작되어 '91년초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미사일은 기존 스커드 모형과는 전혀 다른 디자인에 따라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동1호」는 스커드 미사일의 설계를 책임진 러시아 마가예프 설계소 출신의 미사일 디자이너를 채용하여 개발한 것으로 770kg의 탄두에 약 1,300km의 사거리를 목표로 개발된 것으로 다단계 로켓틀을 사용한 준중거리 미사일이다. 서방 전문가들은 「로동1호」가 북한에서 설계되고 생산되었지만 디자인과 설계는 마가예프 설계소 출신들의 도움을 받았으며 러시아 잠수함 탄도미사일인 SS-N-4와 SS-N-5의 제조기술을 원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의 「국방백서(1993-1994)」는 이미 '90년대 중반 북한은 화학무기와 핵무기의 탑재가 가능한 사정거리 1,300km 미사일의 개발을 완료한 상태로 평가하고 있다. 이 미사일은 한국 전역은 물론 동경과 북경까지도 사정권으로 삼을 수 있게 되어 동북아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군사전문가들도 「로동1호」가 1994년에 초도생산에 들어간 이후

1996년에 실전배치할 정도로 '90년대 중반 이미 양산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였다. 「로동1호」 미사일의 공산오차는 최대 사거리에서 2,000m-4,000m정도로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위 <그림 1>이 제시하는 것처럼 대포동미사일은 미분토를 사정권에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림 1> 북한 탄도미사일 사정권 요도(FAS;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나. 북한의 7.5 미사일 시험발사 평가

2006년 5월 대포동 2호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위한 준비 징후가 포착되면서 북한의 도전적 행위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후 수차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7월 5일(미국 시간으로 미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03시 32분부터 17시 22분에 이르는 동안 잇대령과 무수단리에서 7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편, 국제사회의 관심의 초점이었던 대포동 2호의 시험발사(제3발, 04시 59분)는 1단계 추진체가 분리되지 않아 수분 비행 후 동해상에 착탄되어 실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⁸⁾

북한은 한미일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미국의 독립기념일, 한국 시간으로 야간에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정치적,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제사회에 미사일 기술을 과시한 것으로 인식된다.⁹⁾ 대내적으로는 주민들에게 김정일의 지도력과 강성대국의 위업을 알리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상업적으로는 연간 약 1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외화 획득자원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미래의 수요자들을 유혹할 수 있을 것이다.

약 600여기의 스커드와 100여기의 '로동 1호'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대국' 북한의 7.5 미사일 시험발사는 남북한간에 구축된 신뢰의 현주소를 되돌아보게 하는 사건이며 냉전의 구도를 해체하고자 진력해온 우리 정부의 노력을 뿌리까지 뒤흔든 도전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는 더 나아가 역내 국가들간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위험성이 있으며 일본의 경우 이를 명분으로 보통국가화, 군비증강에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2. 북한의 핵개발 기술 및 10.9 핵실험

북한은 1960년대에 제1연구용 원자로를 구소련으로부터 도입하여 운영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원자력 기초이론 및 실험을 활발히 진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북한은 구소련에 위치한 다국적 연구소인 드브나연 구소에 많은 학자들을 파견하여 동구 및 구소련의 핵물리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원자력 분야의 이론을 습득하게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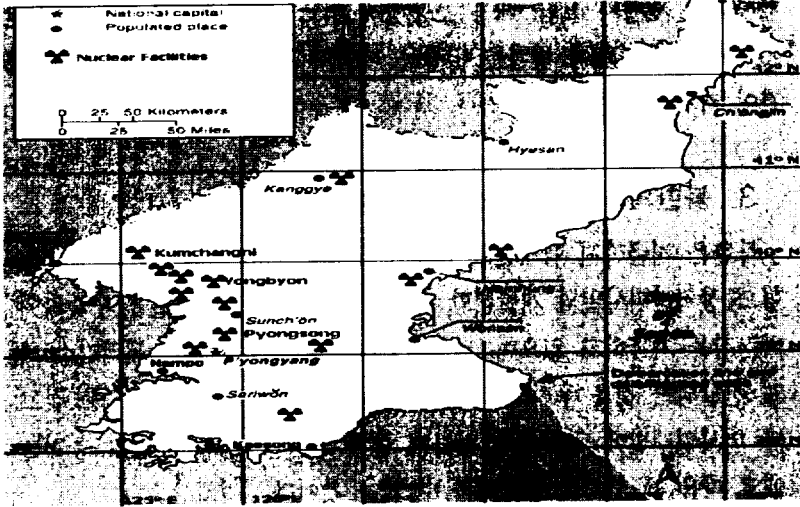
8) 전문가들은 '98년 8월 TD-1호(광명성1호)의 궤도진입 실패, '06년 7월 5일의 TD-2호의 42초간 정상비행후 1단계 추진체 미분리로 실패하였다는 일부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30년 이상의 경험, 다단계미사일 분리(multi-stage separation), 다단계로켓의 안정적 유도(stable guidance of multi-stage rocket), 액체-고체연료의 동시사용(multi-fuel system) 등으로 ICBM 개발이 머지 않아 가능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상세한 정보를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할 것. 김태우, "북한의 미사일 시위가 남긴 문제점", 주간국방논단제1112호(서울; KIDA, 2006.8.14); 윤덕민,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평가", 주요국제문제분석서술; 외교안보연구원, 2006.7.26).

9) "Rocket Man," in *Economist* (July 8th-14th, 2006), pp. 11. 해당 기사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이란 등 미사일 수요자를 겨냥한 기술과시로 외화획득을 노린

국에 앞서 북한은 1987년 가을에 제2원자로를 독자적으로 완공하여 북한산 우라늄을 연료로 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 이 시설은 핵무기 개발의 핵심 시설로 운영되었던 것이 확인되었으며 당시 이 시설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망을 벗어나 있었다. 영변에 건설한 재처리시설은 원자로에서 태운 후에 배출되는 사용후 핵연료로부터 핵폭탄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추출하였다.

북한의 핵개발 수준은 핵실험을 추진할 정도로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드브나 연구소에서 양성된 상당수의 북한 핵물리학자들의 능력과 독자적인 원자로의 건설과 운영을 통하여 상당 수준의 기술과 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AEA는 원자력 기술수준을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하는데, (A)그룹은 원전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하여 운전만 하는 나라, (B)그룹은 원자로 주변장치인 2차계통을 국산화하는 나라, (C)그룹은 핵연료와 원자로를 국산화하는 나라, (D)그룹은 원전기술 전반에 걸쳐 국산화하는 나라 등이다. 북한의 경우 1987년에 원자로를 독자적으로 건설하였으며 핵연료를 자체적으로 조달하여 당시 기술 수준으로 (C)그룹으로 인식되었으며 현재의 기술 수준은 핵폭탄의 제조와 핵실험을 어렵지 않게 할 정도로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핵실험이 시사하듯 북한에는 풍부한 우라늄광,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흑연감속로, 그리고 플루토늄을 추출할 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을 보유하는 등 핵폭탄을 외부의 지원이 없이 독자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원료, 시설, 기술을 갖추고 있는 상태이다. <그림 2>가 보여주는 것처럼 북한의 핵개발 관련 시설은 무려 15개소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면에서의 뒷받침 아래 북한은 이미 부분별 핵폭발장치의 실험을 1980년대부터 70여 회나 실시했으며 1993년도에도 핵폭발장치 완제품(package)실험을 했을 정도로 매우 앞서 나갔다. 2004년 1월 영변 핵시설을 관찰했던 로스 앨러모스연구소 전소장 시그프리드 헤커바사도 동아일보(2006.10.11)와의 대담에서 2004년에 이미 북한은 6-8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갖고 있었으며, 이와는 별개로 상당한 분량의 고농축우라늄(HEU)을 확보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림 2〉 북한핵시설 요도 (FAS: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지난 2006년 10월 9일에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 성공 여부에 대하여 평가가 혼란스러운데 핵폭발실험을 직접하지 않고도 핵폭발장치완제품의 모의실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¹⁰⁾ 핵실험은 “만약 북한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를 만들 의도가 있다면 이번 같은 실험이 매우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¹¹⁾ 10.9 핵실험으로 이제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기정사실화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그동안 비핵화를 겨냥하여 추진한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북의 핵외투를 벗기는 일은 오직 햇볕정책뿐”¹²⁾이라는 정책에 대해 재평가가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외부의 경제지원 확보와 자신의 경제발전을 위해 북한이 결국은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며, 대북포용정책이 이를 보다 가시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2차 핵실험 강행 혹은 국지도발 등)된다면 금감할 수 있는 분위기이다. 현재까지 국

10) 신성택, 북한 및 주변국 전략무기 위협평가와 대응방안 (서울: KIDA, 2004), 6쪽.

11) 동아일보 (2006.10.11), 1쪽.

제사회의 제재와 고립, 대북 포용정책 어느 것도 북한의 미사일 확산과 10.9 핵실험 감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커지기 때문이다.

3. 북한의 미사일 확산 및 핵실험의 의미

북한은 지금까지 핵개발로 외교적 고립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형 중장거리미사일의 개발뿐만 아니라 중동국가에 미사일을 수출하여 군비경쟁을 자극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무기들이 테러리스트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떤 의도를 갖고 핵과 미사일개발에 집착하고 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개발의 동기는 대체로 다음 세 가지로 집약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군사적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전력화함으로써 한미 양국군에 대한 군사적 열세를 만회하고 이를 군사적 억지력의 보장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량의 생화학무기와 함께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의 전쟁수행 잠재력을 배가시킬 뿐만 아니라 유사시 주변국의 대한지원을 사전에 차단하여 군사적, 정치적 목표를 한층 용이하게 달성하도록 하는 수단이 된다. 예를 들어 북한이 남한에 거주하는 수만 미국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거나 주일미군 등 일본내의 군사시설이 대북공격에 위협이 될 경우 이들에 대한 보복을 할 것이라고 선언한다면 미·일의 행동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핵개발과 함께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개발은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 보복능력 및 견제력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핵국가들은 적대국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재래식 무기에 의한 공격 혹은 핵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이란 선택을 하게 된다.¹³⁾ 북한 또한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대량살상무기 및 장거리 운반 수단이란 전략

13) Gedge Quester, *The Politics of Nuclear Proliferation* (Baltimore: The Johns

적 옵션을 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미국의 지속적인 군사지원 하에 경제발전을 이룩한 남한의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 한 장차 북한은 북한의 전력, 특히 재래식 전력분야에서의 우위를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북한은 남한에 비하여 경제의 격차가 커짐에 따라 재래식 무기경쟁에 있어서 대남우위의 지속이 어렵게 되고 장차 남북 군사력 균형의 유지조차도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여 핵무기 및 중장거리 미사일 같은 비대칭전력의 증강을 통하여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속셈인 것이다. 핵무기가 대외군사정책에 의미를 지니려면 핵무기 운반체계의 개발이 병행되어야 함을 북한은 잘 알고 있다. 미사일 개발과 생산능력의 보유는 독자적 전략무기체계의 완성을 의미하며, 이는 대남군사태에서 절대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주요 기반 요소로 평가된다.

둘째,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 생산능력을 갖춘 체제의 위대성을 내외에 과시함으로써 이를 김정일의 지도력 강화,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공고화 및 권력승계의 안정성(김정일 이후의 세습 포함) 등 체제유지에 필요한 정치자원으로 삼을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 선군정치를 내세우고 있는 김정일 정권은 핵무장과 함께 미사일의 생산 등 군비증강을 통하여 군부의 지지를 얻고 김정일 이후의 현 세습체제의 안정적 기반을 더욱 강화시키고 동시에 향후 승계체제에 대한 군부의 단결된 지원을 기대할 수도 있다.

셋째, 외교적 차원에서 핵탄두의 장착이 가능한 중장거리 미사일의 배치는 북한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외협상과정에 핵카드의 유용성을 한층 더 증대시켜 외교적 고립을 타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1993년 북한이 NPT(核확산금지조약)탈퇴 카드를 활용하여 대미협상사태에서 보여주었던 행태에서 쉽게 간파할 수 있다. 당시 북한은 핵카드를 이용하여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직접대화를 성사시키고 급기야 제네바 핵합의를 관철시키기도 하였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보유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의존을 탈피하고 향후 핵과

등을 요구하고 나설 수도 있다.

넷째, 외화조달 차원에서 북한의 핵물질 및 제조기술, 미사일의 완제품, 제조 기술, 부속품, 운용능력 등은 북한의 주요 수출품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군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북한은 스커드 B 및 C 미사일에 이어 독자 개발한 『로동1호』 미사일을 리비아, 이란, 시리아 등지에 판매하였으며, 리비아, 이란, 시리아에 대해 미사일 생산플랜트를 수출했거나 최소한 이들 국가의 미사일 조립공장 건설을 지원한 바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IV.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확산

북한의 핵실험은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였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북한을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로 인식하고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판단할 할 것이나, 현 상황 하에서는 일단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위험한 국가, 핵개발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약속을 파기한 '악의 축'의 하나, 테러리스트의 범주에 들어 있는 불량국가로 단정하고 다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핵협상을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핵무기를 해체하여야 한다는 방향으로 궤도를 달리 하여 다루어지게 되어, 그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더욱 복잡한 단계로 빠져들게 된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 결과와 핵능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더 정밀한 분석과 평가가 요구되는 것이나, 북한이 핵실험을 공개적으로 실행한 이상 이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보고 문제에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북한의 핵 보유로 북한 핵문제는 향후 개발에 대한 중단이 아니라 과거 핵에 대한 해체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는 한반도 안보에 있어 안보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과거와는 다른 수준에서 상당한 영향을 줄 변수로 등장하게 되었다.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이 가능한 상황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보유라는 안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한반도, 특히 한반도의 편치와 관련해서는 대만, 대유럽, 같은 연합이 부각될수록 북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역내 군비경쟁의 확산 가능성 증대

일본과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인 현 방어체제를 깊이 우려하고 있다. 북한에서 발사된 핵장차 「로동 1호」가 발사대를 떠난 후 불과 6분이내에 도쿄, 요코슈카 및 오사카를 가격한다고 생각할 때 그 우려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¹⁴⁾ 일본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과 핵 문제를 자국에 대한 심대한 안보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현실적 한계로 실현성에 의문이 되나 일본은 북한의 핵위협을 빌미로 하여 장기적 안보 강화 차원에서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일본은 현재 30톤 이상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고 핵무장을 한다면 수천 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일본이 현 시점에서 핵무장에 들어갈 것이라고는 예상되지 않지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일본에서 핵무장 운동이 일어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며, 대만과 한국에도 파장이 미칠 것이다. 일본의 핵무장 기도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 역내국가들 간에 핵개발 경쟁 등 군비확산을 불가피하게 촉발할 위험성도 안고 있다.

만일 일본이 핵무장을 시도할 경우 핵무장을 반대하는 주변국과의 관계는 지금과는 다른 상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유사법제화에 따른 일본의 안보정책의 변화도 이러한 상황 변화에 대비한 대비 차원에서 탄력을 받은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일본의 유사법제화가 비록 기존의 「專守防衛」의 틀을 깨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하여 수세적인 입장에서 보다 공세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일본이 향후에 '보통국가화'되는 수순을 자연스럽게 밟을 수 있는 단계일 수도 있다. 북한의

¹⁴⁾ R. J. A. Little, "The New 'Star Wars' II," *Time*, (February 7, 1994), pp. 24-26.

핵실험은 일본의 보수 세력에게는 호재가 된 형상이다.

과거 미국과 더불어 일본은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경제 및 통상관계를 강화하고 보다 개방된 체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북한의 대외개방은 제한적이거나 점차 확대국면으로 발전할 것으로 평가하였고,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질서의 변화라는 대세에 따라 책임 있는 정상국가로 행동할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하여 내부 사정은 어떻든 일본이나 서방에 비친 북한의 대외정책의 노선은 개방을 향하여 가는 변화된 양상이 아닌 과거의 비현실적이고 도발적인 모습 그대로임을 재확인 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졌다.

북한은 나름대로 미국의 압박과 일본의 유사법제화를 들어 자국의 안보 강화라는 주장 하에 핵무기 보유를 합리화 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중국은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대국화를 경계하는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역내에서의 군비경쟁의 분위기가 점차 확산될 조짐이 일고 있음을 내다 볼 수 있는 현상들이다.

2. 핵위협에 대비한 대북군사전략의 대대적 변화 불가피

북한은 그동안 핵실험을 할 때까지 의혹을 증폭시켜 소기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핵문제를 대외관계 개선용 협상카드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개발할 시간을 벌고자 지연작전을 펴왔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군사적으로 볼 때 핵무기는 보유 자체만으로도 그 가공할 살상 능력 때문에 북한의 공세적 전력구조를 강화하여 전쟁수행 잠재력을 배가시킬 뿐만 아니라, 유사시 북한의 핵무장은 주변국의 한국지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협상 시 유리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핵개발은 공세적 전력증강과 체제보위적 억제수단의 확보라는 군사정책의 실천을 목표로 설정, 지속적인 대남 군사우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일관된 군비증강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측면이 있다.

기본 전략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으로 수정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였다고 상정할 경우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의 효용성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핵무기는 정치적·심리적인 전략 자산이며 군사적으로도 상당한 파괴력을 갖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군은 북한의 위협에 중점을 두면서도 탈냉전 이후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불특정 위협과 비군사적 위협이 보다 현실적인 위협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들 위협에 대비하는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군사전략이 변화된 측면이 있다.

즉, 우리 군의 군사전략은 전략 환경의 변화 추세를 감안하여 현존하는 위협과 미래의 불특정 위협, 그리고 비군사적 위협 등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군사전략의 목표가 변화한 것이다. 물론 북한의 위협을 간과한 것은 아니나 미래 안보환경 변화나 위협 주체 다양화에 따른 대비 전략을 운운하는 것은 북한의 위협 수준을 낮게 다룬 결과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의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점감할 수 있다는 막연한 판단에 따라 군사전략 목표의 설정도 양향을 받았던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북한의 핵위협은 의혹의 수준을 넘어섰다. 실제적 위협으로 부상된 것이다. 막연한 미래의 위협에 대하여 준비를 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위협에 대비하는 현실적 접근이 요구된다 하겠다. 앞으로 우리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는 기대를 접어야 하며 대응과 관련하여 비생산적인 논란으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 이를 현실적 위협으로 수용하고 대비전략을 마련하면 될 일이다. 당장 대북 군사전략의 개념을 재정리하고 필요한 억제차원의 무기체계 등은 어떻게 할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무기체계의 개선과 더불어 핵 억제력을 강화할 부대운용의 개념 또한 새롭게 발전시켜야 할 분야이다.

3. 남북관계에서 보다 수세적 입장으로 전환

이러한 대응 전략의 변화가 핵을 가진 국가로부터의 위협을 낮추기 위한

수준은 확연하게 다르다.¹⁵⁾ 남북관계에서 현재도 누리고 있는 불균형적 입지(북한에 유리한)가 핵 무기란 자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게 됨으로써 더욱 강화될 수 있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보다 공세적으로 군사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대남 군사위협 의 강도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억제수단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입장은 더욱 수세적인 국면으로 내몰릴 위험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는 구소련의 경험을 통하여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구소련은 전통적으로 핵무기라는 전략적 자산을 안전보장 수단으로서는 물론이요 외교협상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¹⁶⁾ 이는 흐루시초프 정권에서 핵무기를 전쟁 억지력과 아울러 외교적 목표를 달성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데서 극명히 나타난다. 즉 소련은 수소폭탄이 개발되자 '핵전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핵전력은 향후 어떤 신무기가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억지력을 가질 수 있다는 평가아래 핵을 개발하고 이를 외교 수단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이 같은 소련의 전통적 외교觀은 러시아로 전승되었으며 군사력이 외교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97년 발표된 러시아의 '국가안보 개념'이다. 러시아의 동 안보개념에서는 핵무기의 선제 사용권을 명시함과 동시에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 있는 안보 위협을 보다 포괄적으로 명시하였다.

북한도 이와 같은 소련의 외교적 전통을 유사하게 답습한 측면이 있으며, 탈냉전기에는 군사력을 외교수단으로 사용하는 영역을 한층 더 확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군사력을 안보와 외교수단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도구로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북한은 미·일과의 협상에서 핵 및 미사일 개발을 통해 안보와 경제 두 가지 문

15) 한겨레신문, 2006.10.18, 1쪽. 핵실험 이후 북한의 대외 성명은 핵보유국의 입장에서 사태 변화에 대응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음. 기사가 전하는 북 외무성 담화에 따르면 "당당한 핵보유국이 된 오늘날에 와서 그 누구의 압력이나 위협에 굴복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논조를 펴 이러한 변화된 행태를 읽게 함.

16) 최주기 「소련외교정책론」(법문사, 1988) p. 183

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대화 파트너로서의 지위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군사력을 한국과 미·일에 대해 외교수단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비대칭 전력 및 재래식 무기를 중요한 외교 수단으로서 활용하여 왔는데 핵 무기 보유는 그만큼 북한의 입지를 변화시켜주는 강력한 지원 수단이다. 비핵정책을 선언한 우리로서는 핵 개발이나 보유를 할 수 없게 되어 북한의 핵에 대하여 한국 단독으로 마땅한 억제력을 갖추기가 용이하지 않다. 핵에 대한 억제력은 핵이 가장 경제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주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4. 남북 군사력 균형의 파괴

북한군은 한국군에 비하여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 우위를 점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재래식 전력의 우위에 핵무기라는 비대칭 전력까지 북한이 전력화 할 경우 군사력 균형은 더욱 북한에 유리한 국면으로 바뀔 수 있다. 무기체계의 질적인 우위를 우리가 향상시키더라도 핵무기의 위협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북한의 무기체계는 기습과 속도전, 전후방 동시 전장을 위한 배합전략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으며, 주요 전투 부대를 전방 지역에 집중적으로 추진 배치함으로써 기습의 효과를 노리는 작전개념을 발전시켜 왔다. 한국군 지상군이 북한군에 비하여 병력의 절대수가 열세(북한은 한국의 1.8배)인 점, 장거리 타격능력이 극히 열세인 점, 기습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계의 취약성, 해군의 해양통제권 확보 곤란 및 대공방어능력의 취약성, 공군의 초기 대응 능력 제한 및 기지의 생존성 문제는 개전 시 한국군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다. 특히 북한은 이미 화학무기와 소형 핵무기의 탑재가 가능한 「로동1호」 미사일의 개발을 완료한 상태인데 사정거리가 1,350~1,500Km로서 한반도 전역은 물론 일본의 동경과 니카타 및 오사카, 교토의 이 천보코프스크 주위의 부경 및 상해, 타이베이 등을 삼을

수 있게 되어 동북아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대포동 1호」의 시험 발사를 계기로 사정거리가 15,000km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3단 추진 「대포동 2호」를 개발하고 있어 군사적으로 상당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¹⁷⁾

이러한 취약점들은 한국 측의 무기체계의 질적 개선과 수량의 증가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한미 연합전력으로 우위를 점해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핵 무장화로 인하여 붕괴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마땅한 억제력을 구비하지 않는 한 유사시 한미 연합군사 작전에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 의한 핵우산 보호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우리의 입장은 군사력 불균형으로 인하여 정치적·군사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5. 북한이 핵무장할 경우 핵전쟁에 휘말릴 위험성 증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로 확인될 경우 북한은 비핵국가에 대한 핵무기의 불사용 원칙 대상에서 제외되어 한반도가 핵 표적이 될 위험성이 커졌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무산되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의 비핵지대화가 북한의 핵무장으로 파괴된 결과이므로 이는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체제의 방어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군사 충돌 시 공격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적극적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아 상황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의 대응 수단은 제한을 받게 되어 북이 무력 도발을 하더라도 확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확전이 될 경우 북한은 정권의 몰락이나 체제의 붕괴를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한이 무리하게 핵무기를 사용할 위험성이 있을 경우 한·미 연합군은 이를 적극 저지하는 차원에서 북한핵의 무력화를 위한 군사적 옵션을 선택해야 하는데 전술핵을 동원한 선제적 공격도 고려치 않을 수

17)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aepo-dong 2(TD-2)," in www.globalsecurity.org/wmd/world/dmrc/td2.htm

없을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미국의 NPR(핵태세검토보고서)에 담고 있는 신군사전략의 성격에 토대를 둔 것이기도 하다. NPR이 담고 있는 핵정책 가운데 주목을 끄는 것은 북한, 이란, 리비아, 시리아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보유하고 있는 표적국가에 대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핵무기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우발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발계획은 핵억지 외에 필요시 핵무기를 사용하여 위협의 근원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위협을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군사적으로 사용하여 적을 패퇴시킨다는 공세적인 군사행동의 원칙을 담고 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전통적인 입장 즉,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의 자세가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핵무기 사용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안보위협에의 양상이 다양화되고 있는 정세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사실상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는 미국의 전통적 억제전략의 개념에 대하여 재평가하도록 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기존 핵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는 물론 군의 조직과 기능, 역할에 대해서도 재고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복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존 전력에 대한 효과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에 대한 의문이 군 전문가 및 보수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며, 더욱이 테러리스트에 의하여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가는 현실을 직시할 경우 기존의 소극적이고 방어적 전략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하에 건설된 진지나 대량살상무기 관련 시설 등 비핵공격으로 파괴하기에 어려운 군사적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대량살상무기 공격시에는 즉각적으로 보복하며, 우발적 군사 상황에서 전략적·전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선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하여 왔다. 이와 같이 보고서의 방향은 핵무기 보유에 의하여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유지하게 하여 전쟁

있도록 첨단 최소형 무기로 개발하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군사전략을 수정 보완한다는 입장을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PR이 상정하고 있는 핵 공격 상황은 핵 및 생화학 무기 공격에 대한 보복은 물론 기습 공격에 선제 대응하는 등 매우 포괄적인 바, 핵무장한 북한의 군사도발이 예견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전술핵의 사용이 불가피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기 위하여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해서도 안되며 미국 또한 변화된 핵전략에 따라 한반도에서 핵을 사용하는 일이 독단적으로 결정되어서도 안된다. 이에 따라 대북 제재도 북한을 도발하도록 몰아가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대화로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한 미간의 협력이 필요하다.¹⁸⁾

6. 국론분열에 의한 사회 혼란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엉뚱하게도 국론 분열을 야기하는 빌미가 될 위험성도 있다. 우리 주위에서는 심심찮게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하여 관대한 태도를 가지거나 지레 겁먹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들의 주장은 상식을 넘는 내용이고 궤변이지만 이를 아무런 비판 없이 무책임하게 수용하는 사람들이 적은 수가 아니어서 심히 우려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 핵의 위협 대상은 남한이 아닌 미국과 일본”, “통일이 되면 북한 핵은 한민족의 재산”이라는 식이다. 이러한 주장을 살펴보면 우리를 위협하는 적이 분명히 있는데도 누가 우리의 적이며 우방인지도 모른 듯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경우 당연히 반격하고 격멸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주장대로 라면 어떤 입장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할지를 걱정해야 되는 혼란을 주기도 한다.

6.25 전쟁이 정전상태로 된지 어언 반세기가 지나고 북한에 대한 우리의 경제적 지원과 협력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초적인 신뢰 구축 조차 안 된 상황이다. 돌아온 것은 ‘돈주고 뺨 맞는다’는 자조적인

비난이 일 정도로 진정한 관계 개선의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유는 간단하다. 북의 김정일 정권은 남과의 진정한 신뢰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기보다는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긴장을 유지한 채, 도발과 대화를 병행하여 실리를 챙기고 체제도 관리하겠다는 고도의 계산 아래 남북관계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라크전 이후에 미국의 대북 압박이 거세짐에 따라 북한은 짐짓 경의 선을 연결하고, 이산가족 상봉이나 육로관광을 크게 환영하는 듯 기존의 태도와는 달리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내심 한국과 미국과의 공조를 흔트리고, 한국 내의 남남 갈등을 확산할 의도를 다분히 숨긴 채 체제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대응하는 모습으로 평가된다. 북한 언론 매체들이나 남북 대화의 북측 대표단이 즐겨 '민족공조'를 외치는 것도 숨은 뜻은 한미간의 이간을 획책하는 노림수이기도하다. 이런 와중에 우리의 대북 경계심은 이완되고 심지어 장사정 미사일의 공격 대상은 한국이 아니라든지 핵무기는 외세에 대항하기 위한 한민족의 공동 자산이라는 등 해괴한 주장들이 여과 없이 전파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태도에는 아랑곳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남북화해 추구 및 대북 접근의 부산물일지도 모른다.

7. 한미관계에 악영향 미칠 가능성 상존

북핵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 선택의 방향에 따라 한미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더욱 어렵게 꼬일 위험성도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를 한미간의 공조를 통하여 해결하는 데 노력하지 않고 모호한 입장을 유지할 경우, 한미관계는 북 핵 그 자체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한국의 안보 문제로 악화될 수 있다. 미국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疏美親北' 정책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노무현 정부의 행보에 민감한 시선을 보내왔다. 한미간에 과거에 유지되던 혈맹으로서의 돈독한 신뢰가 회복이 안 된 채로 북 핵문제에 접근하게 된다면 미국은 일방적으로 대북 군사적 압박을 주장하고 나올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사적 충

국과의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미국이 단독 결심에 의하여 군사적 제재를 할 경우 한·미간의 갈등은 확산되고 동맹관계 또한 악화될 소지가 있다. 반대로, 북한이 평화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의를 갖고 임할 경우, 한국이 북한을 지원하는데 있어 미국이 이견을 가질 이유가 없어지며, 미국 역시 대북 경제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기에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모두가 원활해질 가능성이 높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일방주의와 오만함에 반발하여 한국이 미국 편에 서지 않아야 한다거나 민족공조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국제정치의 현실은 냉혹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냉철하게 우리의 생존 여건을 돌아보고 대북 경계심이 해이해진 우리의 안보의식과 우리의 대비체제를 세심하게 짚어 볼 시점이다. 북한의 체제위기 보다도 우리 사회내의 갈등이 위기로 번져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에 대하여 너무 관대하게 대하고자 한 나머지 북한이 저지른 과거의 만행도 애써 간과한 측면을 반성해야 한다. 더욱이 국익이나 체면도 도외시 한 채 북한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모든 것을 잃게 됨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북한의 75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10.9 핵실험은 평화를 추구하고자 대북한 경제적 지원과 협력증진을 위하여 인내를 갖고 추진해온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기대를 한 순간에 날려버린 사건이다. 북한의 핵 실험과 핵탄두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지속적 개발 의지로 인하여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초하고 있으며, 그동안 조금씩 쌓여온 남북한 간의 신뢰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대북포용정책을 일관되게 펴온 정부의 입지를 어렵게 만들면서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이제 평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양측간의 신뢰를 근본부터 해소시키고, 극심한 극한을 면치 못한 이기적, 극단적인 이기적인

력임이 재확인되었다. 7.5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은 10.9 핵실험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주었다. 한국의 안보가 얼마나 취약하게 되었는지를 일깨워 주었으며 북한 동포가 함께 살아야 할 동족이나 엄연한 위협세력이라는 점이다.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배신감으로 향후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요할 것으로 보인다.¹⁹⁾

앞에서의 분석과 같이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핵무장에 집착하는 것은 북한체제의 수호와 대남 군사적 우위확보 등의 정치·군사적 목적 외에 국제적 지위 향상과 외교적 고립탈피, 그리고 전략무기의 수출을 통한 외화벌기 등 외교·경제적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 대내적으로 권력승계와 경제난, 대외적으로 외교적 고립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 운반수단인 미사일 개발을 강행하는 것은 이와 같은 당면문제들을 동시에 타개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그들 나름대로의 계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대외협상시 이용하고 있는 핵카드의 유용성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인식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확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크게 남북관계의 합리적 조정, 외교적 대응과 군사적 대비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남북관계 측면에서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강은 전략을 동시에 구사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의 규범을 무시하고 한국과의 신뢰를 저버린 북한의 행태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하며, 기존의 대북지원 프로그램중 북한에 현금이 유입되거나 지원물자 중 전략물자 및 군수전용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압박과 함께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을 도울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이라는 점을 북한 또한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6자회담의 틀 안에서

19) 상호 신뢰(mutual confidence)는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약화시키는 기저인데 북한의 미사일 개발 중단 약속을 파기한 7.5 시험발사와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어긴 10.9 핵실험으로 남북 신뢰구축조치 가운데 가장 초보적인 신뢰조차도 그동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북한을 설득하고 중재하는 역할 또한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PSI 참여와 관련 핵물질 및 핵관련 기술, 부품의 유출, 미사일의 확산을 막도록 참가국들과 협력하여 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와 역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교적 차원에서의 대응은 우선적으로 유엔 결의안에 따라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수준의 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나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유엔 회원국들과 함께 의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올바른 정책선택일 것이다. 이와 함께 WMD(운반수단 포함) 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돈독하게 해야 한다. 군사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북한은 아직 소형 핵탄두나 장거리 미사일 체계를 발전시키는 데는 시간이 요하고 기술적으로 그리고 재원상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제3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협력을 추구할 것인데 이점에 유의하여 미·일 및 중러,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북한이 제3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외교적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군사적 차원에서 보면 북한의 모험주의를 억지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 무기체계 정비 등을 통한 보복능력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 군사적 보복의 확고한 의지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의 유지만이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예방할 수단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북한의 명백한 공격기도 포착 시 자위권 차원에서 행사할 수 있는 선제타격 작전개념을 발전시키는 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전략정보자산 및 미사일 요격체계의 구축, '로동 1호'에 필적하는 미사일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갖추는 일이 시급히 요망된다 하겠다.

넷째, 군사력 균형을 보장하는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하게 구축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바로 대북 억지력의 강화에 있다고 수차 강조한 바 있는데, 현재 주한 미군의 전력이 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 깊이 인식해야 한다. 남북간의 정권이 스러진 이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미

군의 전력에 의한 세력 균형에 힘입어 불안정하나마 평화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미군의 철수에 따라 억제력이 상실되어 북한은 월등한 군사력을 앞세워 1950년 6월에 도발을 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남침은 당시 북한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던 미군의 전력이 빠져나감으로 인하여 생긴 군사력 불균형의 결과로 설명되기도 한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군사력의 우위나 균형이 유지되어 억지력이 확보됐을 때 평화가 담보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해이해진 대북 경계심을 일깨우고 굳건한 안보의식을 다져 북한의 핵무장 및 미사일 확산에 의한 군사력 불균형의 심각성과 위협스러움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동포라는 감상적 차원에서 남북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삼가야 할 일이며 안보문제는 항상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의 틀 속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억지력건설의 당위성을 우리 모두 제대로 인식하고 대비체제를 구비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Abstract>

The Korean Peninsular WMD Issue : Aftermath of the NK Missile Launch and Nuclear Test in 2006

Sung-Youn Ko

The reason that North Korea has been attempting to develop nuke and long range missiles for consolidating the Kim Jong Il regime stems from its effort to elevate not only their political and military purposes, but also to overcome their diplomatic isolation and to further obtain economic merits by selling off their strategic weapons.

Under the current economic crisis and diplomatic isolation the North seems to consider the effort of forwarding their nuclear experiments and missile developments as a panacea to solve their problems.

This nuke and missile development is hindering the current military balan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stimulating the arms race in the region. The North's nuke program with support of long range delivery system is to spread the arms race in the region, raise the possibility of a nuclear conflict in the peninsula, and incur social confusion from split public opinions etc. As a result, the South seems to pay high cost because it is going to be under pressure to correct its military strategy toward the North.

Our policy options to North Korea's nuke and missile threat are to: first, follow the leve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s response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Resolution; second, establish military force that will deter the North's adventurism through securing retaliation ability; and third, focus on the solidification of the ROK-US alliance in order to guarantee military superiority against the North.

Key words : NK WMD, nuke, missile, military strength, strategic weapon